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 및 과제*

박재홍** 한성대학교·권선영*** 고양시정연구원

2010년 서울어젠다가 선포된 이후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교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그 성장의 특징은 주로 양적 확대에 있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문화예술교육 패러다임이 태동하며 정착된 것이 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특징이었다.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것은 이미 전환기에 들어서 안정화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 어떻게 질적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지속적인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중앙주도형'의 방식이 아닌 '지역중심형'의 방식이 필요함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역화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을 위한 실천이 무엇 인지를 논의하고, 그 논의의 끝에서 지방정부와 지역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특히, 지방정부는 예술 이 창작, 소비, 향유되는 문화생태계의 전통적 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이해하는 일이 전제되어야 함을 제안하였 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분권의 관점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추진체계 패러다임 전환, 정책지원체계의 순환적 구조, 지역의 조례 제정,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 및 상위계획과의 연계,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자 및 활동가 육성·활용·연계, 지역의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와 현장 중심 실천적 연구 지원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문화예술교육,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정책, 문화생태계

I. 서론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있어서 2020년은 중요한 해이다. 대한민국이 발의한 '서울어젠다'¹⁾가 유네스코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고 선포된 10주년이 되는 해이자,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제정된 1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지난 15년의 시간만큼이나 문화예술교육 분야에는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 성과를 지표와 지수로 나타낸 연구(김인설 외, 2018)에 의하면, (지수값을 기준으로) 2011년 대비 2014년과 2017년 모두 약 150%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아래 <그림 1> 참조).

이 성장의 중심에는 '문화예술교육의 접근성 확대' 즉, 양적 성장을 의미하는 서울어젠다 '목표1-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의 확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목표2)나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문화적 도전과제 실천'(목표3)은 상대적으로 그 이행 정도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10년간 성장의 특징은 양적인 측면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는 점을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 한국무용과학회 제41회 추계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된 연구임.

**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무용학과 교수 / jhpark@hansung.ac.kr

*** 고양시정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부연구위원 / ksy@gyri.re.kr

1) '제2차 2010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발의한 예술교육 실행계획에 대한 선언임. 2011년 파리 유네스코 총회에서 193개국 만장일치로 채택되어 전 세계 유네스코 회원국들이 실천을 약속함.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목표① 예술교육의 보편적 접근성, 목표② 예술교육의 질적 향상성, 목표③ 예술교육의 사회적 가치 확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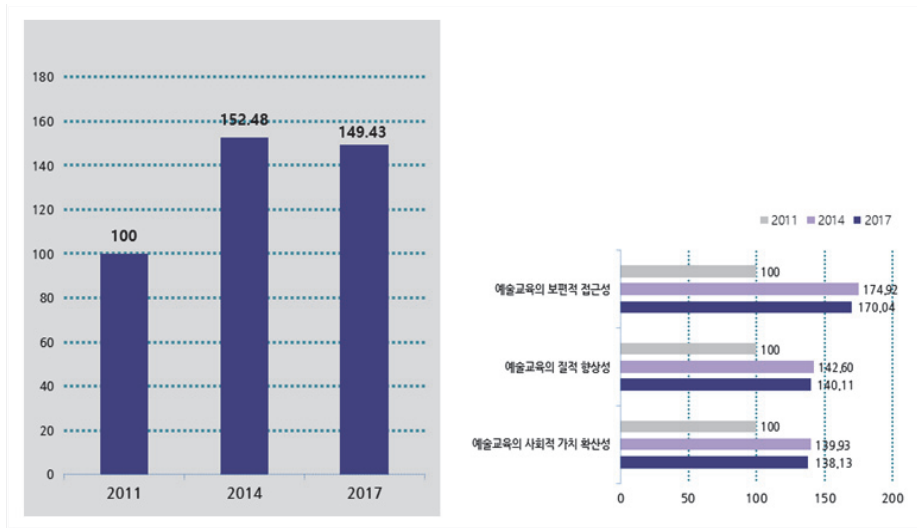


그림 1. 문화예술교육 지속발전지수(SDAEI)로 본 한국의 서울어젠다 이행 실적 (김인설 외, 2018, p.124)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국가통계자료’에서도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수는 2005년 71만 명 대비 2016년 300만 명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고, 교육 수혜기관 또한 2005년 3,220개 대비 2016년 11,900개로 3.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한 국민들과 관련 기관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은 성장은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패러다임이 태동한 이후 정착하는 과정이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며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특성이기이다.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실천적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김병주, 2017; 홍애령, 송미숙, 2015).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에서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전략과 방안들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질적 성장은 공식적으로 모두의 공동목표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교육에서의 질적 성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문제는 어떻게 추동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과 논의도 끊임없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서울어젠다’와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서 제시되어 있는 문화예술교육 질적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방법들 중 ‘지역’에 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서울어젠다’에서는 ‘예술교육의 탈중앙화’(UNESCO, 2010; 김인설 외, 2018)를, 우리나라 5개년 종합계획(문화체육관광부, 2018)에서는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을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주요한 전략으로 제시하며 모두 ‘지역’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지역’이라는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문화생태계의 특성 변화와 지역의 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II.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최근의 노력들

현재는 그야말로 지역의 시대이다. 세계는 국가경쟁력이 아니라 도시(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연방제 수준의 지역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정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문화비전 2030’의 주요의제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내세우며 문화정책의 영역에서도 지역의 역할을 분명하게 강조된다. 실질적으로도 문화예술계 내부적으로 지역분권시대의 도래를 체감하고 이를 위해 역량을

갖춰나가기 위한 많은 노력과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유상진, 2015; 이수철, 2017).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이후 더욱 적극적으로 실천되고 있다.

그 중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종합계획’의 수립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계획(master plan)’이란, 국가가 일정한 분야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국회사무처, 2009). 종합계획에는 국가 단위 차원에서의 방향성 설정(비전) 뿐만 아니라, 목표, 지침, 가이드라인 등이 모두 포함되며, 정부를 비롯한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후속조치로서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법률로 규정된 것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는데, 이러한 종합계획이 2018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처음으로 수립된 것이다²⁾.

이전에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한 중앙정부의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전에는 ‘추진계획’³⁾으로서 발표되어 왔었는데, 이번의 ‘종합계획’은 청사진과 함께 후속조치로서 각 지역별(광역단위별)로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을 각기 수립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추진계획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홍유진, 2018).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 지역분권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으로의 권한 이양을 돕기 위한 청사진과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이 담고 있는 비전과 목표의 내용들을 통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비전 하에 ‘문화예술교육의 지속 성장과 질적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화’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분권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도 반영되어, 전환기에 들어선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새로운 이정표로 기능할 수 있을지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박영정, 2018).

이러한 중앙정부의 종합계획 발표 이후, 17개의 광역자치단체는 종합계획의 지침에 따라 각각 지역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각 지방의 문화재단(또는 유관 기관)과 함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아래 <표 1> 참조).

표 1. 17개 광역자치단체별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제출 유형

지역	제출유형	문서명	분량	사전 연구보고서명	분량	연구기관(진)
서울	자체 보고문서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2022)	22p	서울시 문화예술교육 실태분석 및 정책방향	58p	서울시/ 서울연구원
부산	자체 보고문서	부산문화예술교육종합계획	29p	‘2018 부산 문화예술교육 종합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83p	부산문화재단/ 이순욱 외
대구	자체 보고문서	대구광역시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9~2022)	64p	2018~2022 대구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연구	78p	대구문화재단/ 대구경북연구원
인천	자체 보고문서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18p	인천문화예술교육계획 수립 연구	173 p	인천문화재단/ 인천연구원
광주	연구보고서	광주광역시 문화예술교육 계획(2019~2022)	173p	(없음)	-	광주문화재단/ 광주전남연구원
대전	연구보고서	대전문화예술교육계획	176p	(없음)	-	대전문화재단/ 대전세종연구원
울산	연구보고서	울산광역시 지역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	126p	(없음)	-	울산문화재단/ 울산발전연구원

2) 2015년 5월, ‘문화예술교육진흥법’이 개정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교육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음.

3) 2004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2004-2007)’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07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2007-2011)’ 발표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창의성과 인성 함양을 위한 초·중·고·대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안’ 발표(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2014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발표(문화체육관광부)

세종 연구보고서	세종시 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188p	(없음)	-	세종시/대전세종연구원
경기 자체 보고문서	경기문화예술교육계획(2018~2022)	34p	경기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2018~ 2022)	120p	경기문화재단/경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경기연구원
강원 자체 보고문서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계획(2018~2022)	95p	강원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수립연구 [2018~2022]	243p	강원문화재단/강원대 산학협력단
충북 연구보고서	충청북도 문화예술교육 계획(2019~2022)	425p	(없음)	-	충북문화재단/공공 프리즘
충남 자체 보고문서	충청남도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34p	충남 문화예술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160p	충청남도/충남연구원

(정종은 외(2019), <표 1-3>(p. 7) 재인용)

17개 광역의 문화예술교육계획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들이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중앙정부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참조하면서 각 지역별 특수성과 고유성을 계획에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정종은 외, 2019).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삶의 문해력(Life Literacy)'으로서의 문화예술교육을 구현하고 문화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교육으로 사회 통합력 및 문화 시민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 부산시에서 정부주도 추진체계에서 지역 중심으로 추진체계 전환, 관계 기관 간 유기적 협력망 구축, 유희공간 활용한 전용공간 확충 및 연계 가능 공간 발굴 등의 내용을 계획으로 수립하였다는 점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체계는 문화예술교육이 법적 근거에 따라 지역의 관점에서 실행체계를 갖추어 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진정한 지역분권의 의미를 실현하고 문화예술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에서 보다 더 촘촘하게 안으로 살펴보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호흡하는 기초 단위를 중심으로 한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주요계획들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아래 표 2 참조). 정책의 외연이 중앙에서 광역으로, 그리고 이제는 기초 단위로 확장되며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계획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기초 단위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표 2. 주요계획별 기초 단위 추진과제 제시내용

주요계획	세부과제 내용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 (2018. 1월)	1. 지역 기반 생태계 구축 1-1. 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4. 생활권 중심의 기초지자체 단위 추진체계 구축 ('18~'19) 지역별 현황 및 사례 기초 연구를 통한 단계별 성장모델 개발 → '20 기초센터 시범 시정 → '21 지정 확대)
문화비전 2030 (2018.5월)	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1-3. 문화권리 실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1-3-1. 지역 기반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지역 중심 문화예술교육 행정체계 구축 : 기초센터 지정방안 마련) 6. 지역 문화분권 실현 6-4. 중앙과 지방 간 협치모델 설계 6-4-1.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 기초센터 지정 기반 마련
새 예술정책 (2018.5월)	1.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 라. 협치체계 구축 및 법제 정비 라-2. 지역분권 및 자율성 제고(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체계화 : 광역센터 역할 강화 및 기초단위 추진체계 구축)

	[세부과제] 중앙-광역 간 협력체계 강화 및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신규) 지역 중심 추진체계 개편
	-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방안 연구('18)
	· 지역 기반 정책추진을 위한 중앙-지역 간 역할 재정립 및 광역기초센터 운영모델 및 단계별 추진 전략 도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 추진('19~'20)
전략계획	- 지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 실시, 지원법 개정안 발의
(2018~2022)	[세부과제] 기초단위 추진체계 및 협력망 구축 지원
	· (신규) 기초 단위 문화예술교육 추진체계 구축
	-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 및 시범방안 연구 ('19)
	- 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시범 지정('20) 및 점진적 확대('21~)
	· (신규) 지역 단위 통합 협력망 활성화 지원
	-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정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협의회 구성 운영 지원('20~)
	- 지역센터 중심 학교-사회문화예술교육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지원('20~)

(강승진 외(2019), 표(p. 3-4) 재구성 인용)

기초 단위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지역정책으로 수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물론, 정책의 효과나 성패에 조례의 여부가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조례 여부와 상관없이 성공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례는 지역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각종 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에 근거가 될 수 있다. 상위 종합계획 만으로는 지역에서의 특성을 담은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처럼, 법률만으로는 지역정책을 진흥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정상우 외, 2012).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한 기초 단위 지역의 사례는 현재 모두 여섯 곳이 있다. 2013년 광명시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가장 먼저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성남시(2016년 제정), 목포시와 창원시(2017년 제정), 춘천시(2018년 제정)와 구리시(2019년 제정)가 차례로 조례를 제정하였다. 종합계획에서 기초단위에서의 문화예술교육 실행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조례 제정의 사례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조례 제정을 위한 사전단계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조례라는 제도에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지역시민, 문화예술관계자들 간의 끊임없는 공론의 기회가 필수적이다.

20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법률로서 제정된 이후, 지역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조례가 제정되기까지 약 10여 년이 소요되었다.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226개의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6개 지역에서 조례를 제정한 것에 그쳐,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의 지역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은 긴 시간의 준비를 끝내고 이제 막 시작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본격적인 출발이 이루어지고 인해 추동력을 얻었을 이 시점에서 우리는 또 다시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 출발에 제도와 정책만 존재하는 것은 아닌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듯 문화예술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인지, 중앙정부 정책이 갖는 획일성이 지역 문화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하고 논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III. 문화생태계의 변화와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언급할 때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과 같은 첨단기술을 함께 떠올린다.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하며, 첨단기술과 예술이 어떻게 접목될 수 있는지를 부단히 설명해왔다(오재환, 2017; 전지윤, 2019; 현대용, 김정준, 2018). 문화예술계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첨단기술과의 접목뿐일까?

최근 ‘포노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책(최재봉 저, 2019)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이 책은 단순히 4차 산업혁명에서의 핵심 기술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을 든 신인류를 뜻하는 포노 사피엔스의 생활양식과 행동패턴이 시장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기술 혁신에 대한 이해가 아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미래를 논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 지점에서 문화예술계가 지금과 미래의 시대에서 어떻게 변화를 인식하고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인식하고, 문화예술에 어떻게 참여하며, 문화예술을 어떻게 향유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오히려 중요하며, 이러한 패턴들에 나타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분석 및 이해하는 일이 절대적인 것이다.

이는 정종은(2018)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화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 및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정책 전문가들은 첨단기술 자체에 대해서나 이러한 기술을 직접적으로 문화분야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종국적으로 초래할 문화정책의 질적 변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변화들은 무엇이 있을까? ‘기술’의 변화가 아니라 ‘사람’의 변화에 주목하여 이를 설명한다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술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변화하였다는 점이다. 과거에 있어 예술의 역할은 정서감 함양에 있었다(라도삼, 2016). 창작자가 예술작품에 새겨 넣은(또는 예술작품을 통해 표현한) 이념과 철학을 발견하고 공감하여 감상자 자신의 정신적 세계를 고양시키는 것, 현실세계와 분리된 미적인 것에 대해 창조하거나 관조함으로써 큰 감동을 일깨워내는 것 등이 예술의 본질이자 역할이었다. 그러나 현대의 예술은 창작자-작품-감상자의 관계 속에서만 역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변화시켜 새로운 형태(관계나 가치)를 만들어내기도 한다. 완성된 결과물로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결과물의 수준이나 질에 상관없이 그가 하는 역할로서 가치를 발휘하도록 인정 또는 기대 받고 있는 것이다(라도삼, 2016).

둘째, 예술을 즐기는 사람들의 문화가 변화하였다. 일반적인 사물에 지나지 않던 것이, 또는 미(美) 보다는 추(醜)에 가까웠을 물체가 예술작품으로서 귀한 대접을 받게 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예술의 가치가 변화하며 예술작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예술적 가치를 부여받는 대상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그리고 가치를 부여하는 주체 또한 예술가에 한정 짓지 않게 됨으로써 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그것을 향유하는 자의 관계 방식 또한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예술을 즐기는 방식이 주로 전시장이나 공연장에서 소비되는 소극적 형태를 띠었다면, 이제는 우리 삶의 모든 장면에서 예술과 관계 맺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로 향유하게 된 것이다.

셋째, 예술을 둘러싼 사람들의 역할이 변화하였다. 이제 더 이상 예술을 창작하는 사람이 고도의 훈련을 통해 숙련된 예술가이어야만 한다면 주장에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다. 누구나 예술가가 될 수 있다는 구호들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는 예술을 즐기는 방식, 즉 예술과 개인의 관계 방식이 다양해짐에 따라 과거의 단순 소비자가 새로운 창작자로서 역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예술가들은 창작활동 이 외에도 매개자나 촉진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게 되어 예술을 둘러싼 기존의 사람들의 역할은 더욱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창작 → 생산/보급 → 전시/발표/전승 → 소비/참여’로 그려지는 기존의 문화생태계 구조 속에서 함께 이해해야 하며, 그 구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참여하는 경험은 주로 문화생태계의 마지막 단계로 설명되는 ‘소비/참여’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설명되는데, 이때 문화예술교육의 역할은 사람들의 문화소비 및 참여의 세부적인 과정들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사람

들이 문화예술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사람들의 문화소비 및 문화향유는 ‘소비/참여’ 단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생태계 전반에 걸쳐 어느 단계에서든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 문화예술교육은 즉, 창작, 생산/보급, 전시/발표/전승을 포함한 문화생태계의 전 구조 속에서 역할 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을 둘러싼 변화들을 이해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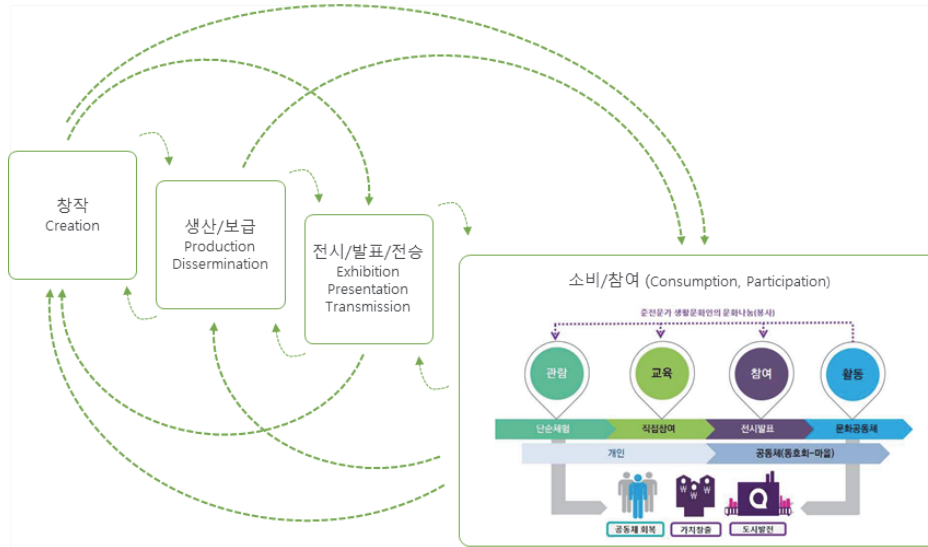


그림 2. 문화생태계의 구조와 사람들의 문화소비 및 참여

* UNESCO(2009)의 ‘Culture Cycle’ (p. 20)의 문화생태계 구조와 전북연구원(2018)의 생활문화생태계 구조의 내용 참조하여 그림 수정

IV.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과 과제

앞서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는 ‘지역화’의 실천이 중요하며, 예술을 둘러싼 변화들과 함께 문화생태계의 지형을 이해하는 일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즉, 지금까지 문화예술교육의 추동력이 중앙정부로부터 출발하였던 이제는 민과 협력하는 지방정부 중심의 형태로 추진되어야 바람직하며, 지역의 문화정책이 지역의 문화생태계와 문화를 둘러싼 변화들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를 지역의 문화정책 안에서 어떻게 실현해 가야하는지를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정책의 추진체계 방식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하향식(top-down) 방식이 중앙집권의 추진체계를 설명한다면, 상향식(bottom-up) 방식은 지역분권의 추진체계로서 대표될 수 있다. 추진체계의 구조 속에서 가장 아래 또는 말단에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라, 담론과 이슈가 모아지는 첫 번째 단계로서 지역을 상위(시작점)에 놓아 보자는 시도가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정부의 집권화이다. 지역분권화의 흐름과 법제도 개선을 통해 지방정부가 문화예술교육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지역민들을 중심에 두는 것을 전제로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앙집권화의 모습이 규모만 축소된 형태로 지방정부에서 그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법제도적 맥락을 같이 하면서도 각 지역의 특성 및 환경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원체계나 행정체계 중심이 아닌, 지역주체들의 필요에 의해 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지지하고 지원하는 맞춤형 지원으로의 체계 변화를 전제로 하는

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이 기초 단위에서 발견하고 생성한 지역의 담론과 이슈들이 광역 단위를 거쳐 중앙정부로 모아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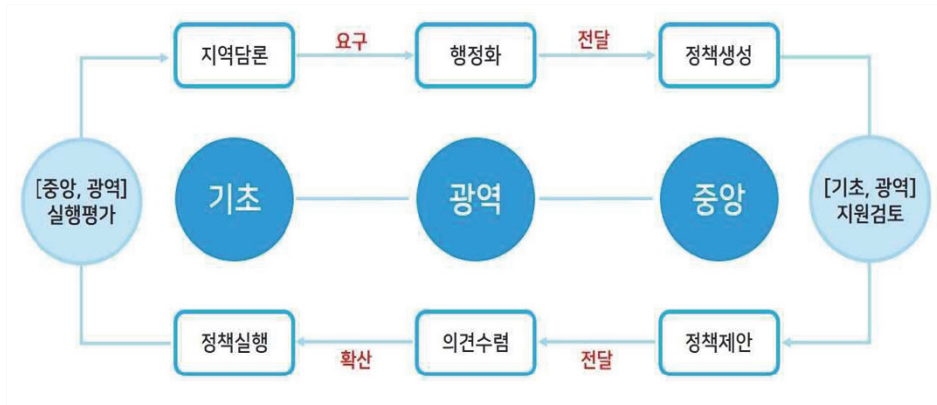


그림 3.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의 패러다임 변화

* 강승진 외(2019).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서. 그림 2(p. 35) 재인용

둘째, 지역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 여부와 상관없이 정책이 진행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조례가 기능을 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지역에서의 조례는 지방정부가 해당 정책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얼마나 보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 무엇보다 조례를 근거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지므로, 이는 지역기반의 정책을 펼치는 데에 있어 기초적으로 기반이 되는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 제정에 있어 중요한 점은, 우리 지역에 맞는, 우리 지역에서 생성되는 이슈와 담론이 반영된 내용으로 조례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역의 조례가 지역의 상황과 잘 맞지 않거나,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조례가 제정된다 할지라도 제도적 근거로서의 실질적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제안한 패러다임의 전환에서 필요했던 지역담론과 시민의견수렴에 대한 과정이 조례의 제정과 시행의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기초 단위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의 종합계획에 따르면 광역 단위까지는 의무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기초 단위는 권고사항일 뿐 법적 필수 사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기초 단위에서 또한, 먼저 수립된 상위계획의 내용을 지역 상황에 맞게 어떻게 반영하여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보다 체계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상위계획 뿐만 아니라 유관 법률(문화진흥기본계획(문화기본법에 근거)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 등)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생태계 구조의 모든 단계에서 실천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각 지역의 상황과 사정을 반영하는 것은 물론 문화예술 관련 법률과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계획이 세워져야만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구조 속에서도 흐름을 같이 하며 체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는 것이다.

넷째,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자 및 활동가들을 육성하고 활용 및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중앙정부 주도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으로 파견하는 시스템으로는 지역에 필요한, 지역에 적합한, 지역에 자원을 활용 및 연계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지역이 자체적으로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력 풀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계 전반에 걸친 인적 자원 조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인력과 지역을 어떻게 연계하여 문화예술교육의 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별 고민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역의 우수 사례 발굴 및 공유와 현장 중심의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우리나라 문화예술교육 전체의 질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실천되는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공유되어야 한다. 현장에서는 정책수립을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행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책보다도 문화예술계의 변화와 흐름을 더 빨리 인식하고 반영해 나가는 경우도 많다. 현장에서의 실천이 반드시 정책의 지침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의 인력들이 밀접하게 관계하며 지역에 기여하기 위한 형태로 정책의 테두리 밖에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책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하고 이 사례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록하고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사례들을 공유할 수 있는 정보의 플랫폼이 필요하며, 사례 중심의 현장연구 등 실천적 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이는 중앙정부 보다는 각각의 기초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과 마을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례들과 관련 연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을 위한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을 다섯 가지의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정부가 발표한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서의 ‘지역화’에 대한 계획과 실천이 또다시 중앙주도형 ‘지역화’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주도형 ‘지역화’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실천방안이라 할 수 있다.

지역분권, 지역화, 지방분권 등의 단어로 이야기되는 ‘지역의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놓여진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의 주체들(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전문가, 현장실천가, 연구자 등)이 소극적인 존재(수립된 정책의 ‘이행자’)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존재(정책의 이행과 더불어, 정책에 지역의 이슈와 담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안내자’와 ‘견인자’)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승진, 안태호, 최지만, 신세연(2019). 기초(생활권) 단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역 릴레이 간담회 결과보고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보고서. KACES-1922-C001.
- 국회사무처(2009). 법률용어의 표준화 기준. 국회사무처예규 제28호.
- 김병주(2017). 문화예술교육 질적 제고의 의미와 방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토론회 자료집.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정책토론회(제3차 토론회: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성장)’. pp. 1-23.
- 김인설, 김영주, 이성희, 권선영(2018). 서울어젠다 이행실적 점검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 라도삼(2016). 예술지원정책의 진화와 지역의 현안(pp.6-13). In 예술가의 지역살기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제2의 안양부흥을 위한 ‘안양 예술인지원 대토론회’ 자료집(2016년 9월 8일).
- 문화체육관광부(2018).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2022).
- 박영정(2018). “전환기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이정표”. In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년 1월 22일). 문화예술교육 웹진 ‘Arte 365’ (<http://arte365.kr/?p=63925>).
- 오재환(2017). 공연예술의 기술 융합적 작품 실현 여건과 창의적 인재 양성 문화 예술교육 강화 필요. 부산발전포럼, 164, 26-35.
- 유상진(2015). 지역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성남문화재단 사례. 국토(2015년 7월호), 405호, 72-76.
- 이수철(2017). 지역에 밀착한 문화예술교육 정책: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정책 전개 과정을 중심으로. IDI도시연구(12), 7-37.
- 전지윤(2019).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증강현실 기반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디지털 문화유산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12), 2357-2366.
- 정상우, 정필운, 김성태, 유지형(201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활성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 정종은(2018).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정책 이슈와 과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의 적용. 지역과문화, 5(4), 21-41.
- 정종은, 전민정, 최지원, 하유준(2019).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분석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구보고서 KACES-1940-R017.
- 최재봉(2019). 포노사피엔스(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경기: 쌤앤파커스.
- 현대용, 김정준(2018). 4차 산업혁명과 문화예술산업의 융합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방안: 호남권을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22(1), 211-233.
- 홍애명, 송미숙(2015). 문화예술교육 정책 분석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발전방향. 한국무용연구, 33(1), 167-190.
- 홍유진(2018).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예술교육”. In 삶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 5개년 종합계획(2018년 1월 22일). 문화예술교육 웹진 ‘Arte 365’ (<http://arte365.kr/?p=63925>).
- UNESCO(2009). *UNESCO Framework for Cultural Statistics*.
- UNESCO(2010). Seoul Agenda: Goals for the Development of Arts Education. *The Second World Conference on Arts Education, Seoul 2010*.

ABSTRACT

The Directions and its Tasks of Cultural policy in Local for Qualitative Promotion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Jaehong Park** Hansung University · Sunyoung Kwon*** Goyang Research Institute

Last year,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attempted to show the performances of art and culture edu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CE) by index and indicator while conducting 'Basic study to check performances of Seoul Agenda (Kim, et al., 2018)'. According to this study, as of 2011 immediately after Seoul Agenda was declared, our country's ACE has achieved an explosive growth to date. According to its findings, the highest achievement was done in the area of 'Increase of accessibility to ACE' namely the 'Seoul Agenda - Goal 1'. This must be a growth that is essentially needed while paradigms of ACE took place for the first time in our country and settled down. What we need to do now is practical implementation of ACE instead of a meaningless outcry for upholding its qualitative growth. Therefore, this study sought to review the efforts so far for qualitative growth of ACE and discuss the directions in the future. 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of 'localization' and 'understanding of changes in cultural ecosystem' for the qualitative growth of culture and arts education. Specifically, the following 5 ways were suggested: 1) paradigm shift of the promotion system of ACE policy from the perspective of decentralization, 2) the establishment of local ordinances, 3) the establishment master plan for ACE in local government and the linkage with upper master plan of central government, 4) fostering, utilizing, and linking artists and activists in local, 5) finding and sharing best practices in local and supporting practical research on site. This study has proposed the above five directions of cultural policies in local for qualitative growth of ACE. These are just some of the ways in which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localization' can be carried out in a truly local, rather than central. Above all, what must be maintained is that those of citizens, experts relevant with arts, practitioners in field, local government, are the main actors in local acting as an active being, not as a passive being.

Key words : Culture and arts education, local government, local culture policy, culture ecosystem

논문투고일: 2020. 02. 28

논문심사일: 2020. 04. 09

심사완료일: 2020. 04. 09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 in 2019.

This work was supported by 41st Korean Society of Dance Symposium.

** Professor, College of Art, Department of Dance, Hansung University

*** Associate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Economic & Social Research, Goyang Research Institute